

광주·전남 학교 561곳 지진에 취약

임시 주거시설 10곳 중 8곳 내진설계 적용 안돼...경로당·관광서 등 1466곳 달해

광주·전남지역에 설치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10곳 중 8곳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배포한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총 1762곳의 임시 주거시설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296곳이며 나머지 1466곳(83.2%)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에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임시 주거시설 중 경로당이 49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가 478곳, 교회 65곳, 관광서 59곳 순이다. 광주는 137곳의 임시 주거시설 중 41곳만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96곳(70.1%)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

았다. 이 중 학교가 83곳이며 관광서 8곳, 경로당 2곳이다. 전국적으로는 임시주거시설 1만3560개소 중 72.3%에 해당하는 9808개소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이 임시 주거시설 1773개소 가운데 1559개소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미 적용률이 87.9%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 87.1%, 충북 83.8% 순이다.

반대로 대구는 임시 주거시설 216개소 가운데 35개소만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미 적용률이 16.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울산시 42.3%, 서울시 42.9%, 부산시 47.6%, 전북 50.1%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경로당과 학교, 마을회관이 임시 주거시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진 발생 시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이재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각계 기관이 공동 노력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경 기자 jkpark@

전남 해양세력, 고려 건국에 한 역할은?

12일 목포대서 '전라도 천년' 학술회의

1100년 전, 고려 건국 과정에서 전남 해양세력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조명된다. 전남도는 오는 12일 목포대학교에서 '고려 건국과 전남의 해양세력'이라는 주제로 '전라도 정도 1000주년,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학술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전라도 천년과 고려 건국 과정에서 전남지역 해양세력의 역할과 위상을 집중 조명한다. 학술회의 1부에서는 강봉룡 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장이 '고려시대 전남의 해양사적 의의'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고경석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연구부장이 '장보고의 해양유산'을, 김명진 경북대 박사가 '왕건과 압해도 해상세력 수탈 능력'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문안식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장이 '결핵의 후백제 건국과 전남 동부지역 호족세력의 추이', 김갑동 대전대 교수가 '왕건의 고려 건국과 나총례, 오다련, 최자명', 김병인 전남대 교수가 '고려

태조의 훈요 10조에 대한 재검토'를 발표한다. 이어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황상석 장보고글로벌재단 사무총장, 신성재 해군사관학교 교수, 정동락 대가야박물관학예연구사, 이병희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종합토론을 벌인다. 목포·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해지역은 유력한 해양세력이 장보고의 유산을 계승해 청자 등 생산 활동과 국내외 해상교류 활동을 펼치면서 큰 부를 형성했다. 여수·순천·광양지역 역시 강력한 해양세력이 일어나 당시 패권을 다투던 견훤과 왕건의 주요 표적이 되는 등 전남 지역은 후백제 건국(900년)과 고려 건국(918)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학술회의와 단행본 출간사업은 고려 건국 과정에서 전남지역 해양세력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섬·바다의 도시 전남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찾아보는 기회"라며 "전라도 1000년 기념사업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jwpark@kwangju.co.kr



평양...워싱턴...판문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관심

가시권에 들어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12일 1차 정상회담(사진)이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이 또다시 제3국에서 열릴지, 양국 수도에서 열릴지 지금으로선 미지수다. 단 하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북한은 평양 정상회담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방북했을 때 폼페이오 장관 수행단과 식사를 함께한 북측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 미국 대통령을 안방에 불러들임으로써 얻게 될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생각할 때 평양 개최를 주장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 측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중립 성향의 제3국에서 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말이 들린다. 1차 회담을 개최한 싱가포르보다는 유럽 국가를 '우선순위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나온다. 유럽이라면 1차 회담 후

보지라도 거론됐던 스웨덴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학창시절을 보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무난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유럽 제3국의 경우 김 위원장의 이동 문제가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차 정상회담 때 중국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갔듯 이번에도 다른 나라 항공기를 타야 한다는 점이 북한으로서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내 개최 옵션도 유호해 보인다. 만약 북미 간의 의제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돼 11월 6일(현지시간)의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 선출)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일 경우 미국 측은 워싱턴 개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판문점을 옵션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검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솔깃'했다가 결국 채택하지 않은 카드라는 점에서 낙점되는 불투명해 보인다.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 영빈관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북 FFVD 비핵화 공동 결의 재확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핵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양제츠 정치국원 및 왕이 국무위원과 개별 회동을 하며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했

다고 전했다. 그는 "미·중은 대북 압박 작전에 통일된 상태를 유지하며,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한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관계에 대해 "양측은 건설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양자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은 남중국해와 인권을 포함한 미·중이 동의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직접 언급했으며, 양안 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에 日 정부 "위안부 합의 이행하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副) 장관이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산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관방 정례 브리핑에서 "앞선(9월 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한일합의를 파기하지 않겠다.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재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단의 현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설명도 있었다"면서 "양국 정상은 이 문제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로 지혜를 내지는 것에 일치했다"고 설명하며 합의의 확실한 이행을 계속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고노 다로 외무상에게 재단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화해·치유 재단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해산 방침을 시사했다. 이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8일자 지면에서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강경화 장관이 지난달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고노 외무상과 회담할 때 재단의 연내 해산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합니다.010-3605-5000

투자자 모집

경/공매 입찰/낙찰물건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8-209호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채용 공고문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광주지역의 정보통신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의 비전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자를 원장으로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1. 임용직위 및 선발인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상근임원), 1명

2. 임기(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 연임 가능

3. 주요직무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 업무 총괄
- 정부 및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등 대내외적 관계 업무
- 정보통신과 문화산업에 대한 중장기비전과 목표 설정 및 실행
- 조직 및 인사회 운영, 인적자원 개발 등 조직 내부 관리
- 정보통신과 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제반 업무 등

4. 응모자격

- 필수요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

- 정보통신이나 문화산업 관련 기관 근무 경력 보유
- 중앙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 보유
-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고 공공기관의 경영능력 보유

○ 직무수행 요건

-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 관리능력
-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5. 보수수준

- 연봉은 진흥원 규정에 의한
- 연봉 이외에 사택, 관용차량(자가운전)을 지원할 수 있음

6.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지원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
- 2차 : 면접전형
 - 면접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방법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10분 이내 발표 후 개별 질의·응답
 - 심사기준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직원화력, 윤리관 등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7.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전화 또는 서면)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itct.or.kr>)의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 접수기간 : 2018. 10. 17. ~ 10. 22. 15: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
 - 우편접수 : 등기우편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61740)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 광주CG센터 3층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응시원서 재중)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용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면접시험장에서 교부

9. 제출서류

- 지원서(붙임서식 1) 1부
- 자기소개서(붙임서식 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서식 3) 1부
 - * 면접심사 시, 제출된 직무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요약하여 서면 또는 PPT발표하여야 하며, 발표 자료는 7부를 면접심사 당일 지참하여 제출함
- 임원 결격사유 점검표(붙임서식 4)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서식 5)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사항기록) 각 1통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대학교 이상의 학위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단, 외국 박사학위일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위 등록증 사본 첨부)
- 기본증명서 1부
- 학위논문(석사, 박사) 요약문 각 1부(서류전형 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10. 기타사항

- 응모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다시 모집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1차 서류전형 합격자 포함)는 전화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미채용자에 대하여 응시대상자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반환하며,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062-610-2401) 및 전자우편(hak@gitct.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